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요약본

Module 3.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친족상속법

더 이상 길은 없다.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1) 이혼에 앞서 고려할 사항들
- 2) 협의이혼하기
- 3) 재판상 이혼하기

1. 이혼에 앞서 고려할 사항들

1) 이혼 방법의 선택

민법상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과 법원을 통한 “재판이혼”이 그것이다. 만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방법부터 정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재판이혼 보다는 협의이혼이 편리하다.

문제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인데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재판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합의가 안 되는 경우란 이혼자체에는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의가 안 된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채 협의이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안 된 경우에도 재판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상호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추후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으로 문제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2) 형사고소의 문제

이혼소송에 까지 이른 상태에서는 부부간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굳이 형사고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정폭력, 협박, 명예훼손, 간통,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다양한 사유 중 한 두 가지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인생에서 큰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 만큼 형사고소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한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가정의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너무나 비열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3) 집을 나오는 문제

협의이혼이건 재판이혼이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집을 나오면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이혼을 각오한 사람끼리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혼을 전제로 집을 나오는 것에 대하여 실무상 가출로 보지 않으며 이혼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4) 가재도구와 패물 문제

이혼이 되기 전에 가재도구와 패물을 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불리하지는 않은지 특히 절도

로 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리하게 되지 않고 절도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집을 나올 때 필요한 것은 가지고 나오면 된다. 맨 몸으로 집을 나온 상태라면 이혼신고 전까지 언제든지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한편 이혼신고 이후에는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5) 부부의 빚 문제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이므로 빚을 진 명의자가 빚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진 빚이라든가 상대방 때문에 발생한 빚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6) 전문가와 상담하기

이혼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것이 좋다. 부부클리닉, 부부상담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스스로의 판단만을 믿고 “절대로 같이 못 산다 상담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등의 선입견을 버리고 한 번 이용해 보기 바란다.

2. 협의이혼하기

1) 협의이혼의 개념

협의이혼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이혼으로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합의 후 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다음 라. 구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마무리 된다.

가. 이혼에 합의하기

가) 필수적으로 이혼을 할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전부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하여야 한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법적 분쟁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

나) 이혼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합의하면서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지급하지 않고 6개월 후, 1년 후 또는 재산 처분 후 등으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재판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작성할 때, 법원의 확인을 받을 때, 구청에서 이혼신고를 접수할 때 모두 있어야 한다. 즉, 그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합의가 안 되어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재판이혼을 하여야 한다.

라)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묻지 않는다. 재판이혼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는 점과 다르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하기

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한다.

나)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

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마)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법원은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 성년 도달 전 1개월 ~ 3개월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이혼 숙려기간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단축이 가능하다.

다. 협의이혼의사 확인받기

가)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나)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다)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서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한 후 확인기일을 다시 지정받은 다음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 확정되면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한다. 지정된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확인 처리된다.

마)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는데,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된다.

라. 구청에 이혼신고하기

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라)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다.

마)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바)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재판상 이혼하기

1) 재판상 이혼의 개념

부부 쌍방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을 통한 이혼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로 이혼을 하는 경우와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조정은 법원에서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따른 이혼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로 법정되어 있으며, 제1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다.

민법 제 840 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 841 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 1 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842 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 840 조제 6 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 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법정된 6가지 사유가 아니면 재판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사유의 경직성을 보완하고자 6호에서는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 트 169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위 판례의 판시사항 중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민법 제 840 조 제 6 호의 의미를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강제가 고통이 되는 경우□로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보다 책임이 가볍기만 하면 이혼청구가 인용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3) 재판이혼 전 필수 준비사항

가. 증거확보하기

이혼을 청구하는 쪽이라면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이다. 보통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사실확인서, 치료사실확인서, 사진, 각서, 편지, 메모, 이메일, 녹음테이프, 고소장,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 사본, 수표나 입출금 계좌 사본, 대출잔액확인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현금보관증, 녹음테이프, 시가확인서 등이 증거자료이다.

나. 재산확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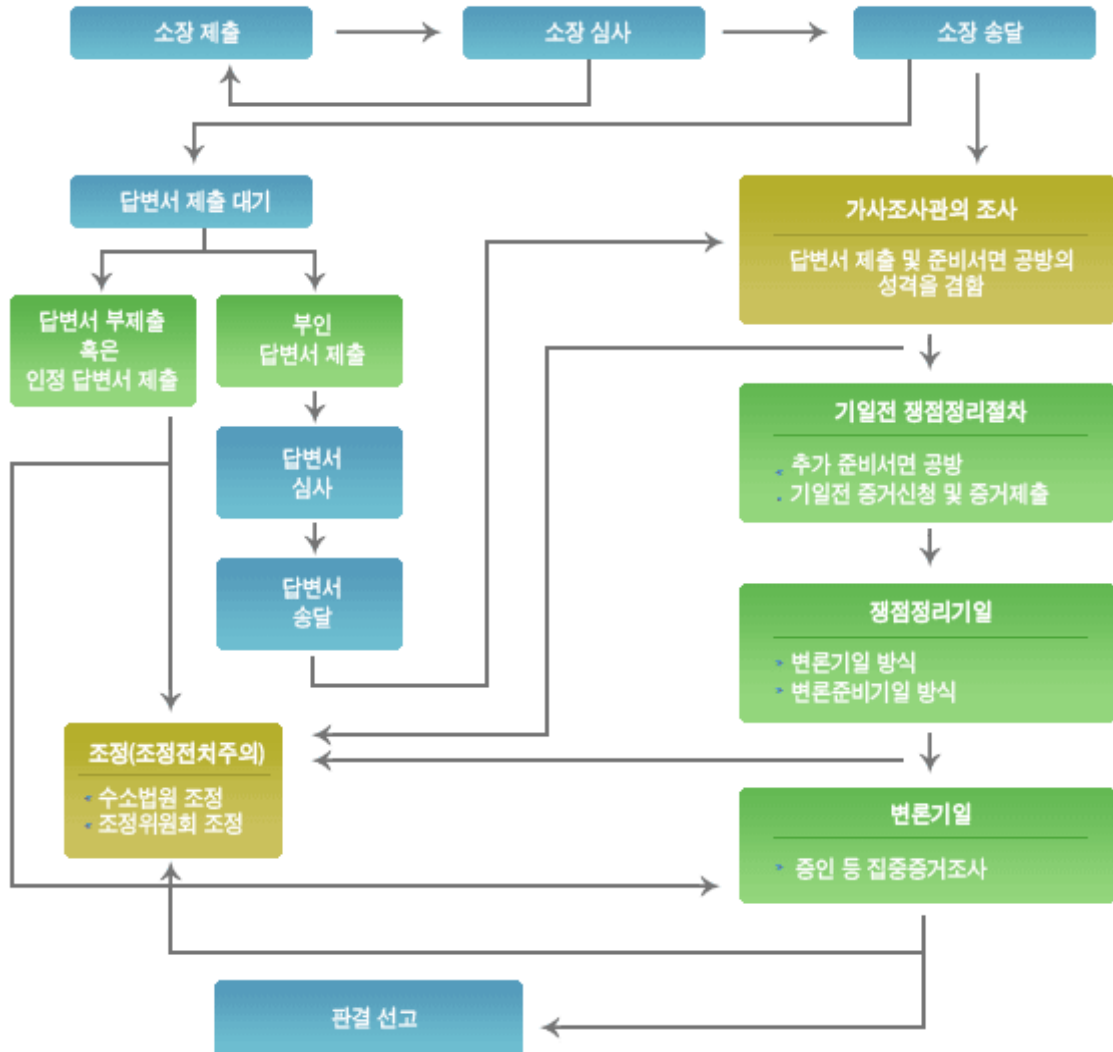
03차시 “승소보다 중요한 가압류, 가처분”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는 재판이혼의 경우에만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특히 상대방이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찍 준비할 수록 좋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본인의 소유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부동산이나 그 소유지분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고 일정액의 돈으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해 두면 된다.

4)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도 소송절차인 만큼 05차시 “소송절차 이해하기”에서 학습한 민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으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가. 조정전치 주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이란 앞서 학습한 바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조정기일은 변리기일 전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요에 따라 변리기일 이후에도 열리며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조정이 시도되기도 한다.

나.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

반드시 당사자 본인들이 출석하여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쌍방의 대리인(변호사)들은 출석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이혼사유, 양육문제, 재산관계 등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다. 원칙적 변론기일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재판이혼절차에서는 변론을 열어 이혼사유의 존부, 양육문제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다.